

#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 법인세 납기 연장”

임광현 국세청장, 여수산단 찾아 세정 해법 제시  
김해·포항 이어 지방 간담회…공제 애로 등 청취  
환급금 법정기한보다 일찍 지급…전담반 구성도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산업위기·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를 찾아 석유화학 기업 등의 애로를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들과 간단한 점심을 함께하는 브라운백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은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맞은 여수를 방문해 지역 기업 인들을 만났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 잉글로벌 수요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인들은 여수지역에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제 대응지역에 지정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위기 지역’ 법인 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위기 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증진기업까지 적용받고 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 세 100%, 이후 2년간 50%) 받는 혜택이 있지만, 선제대응지역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를 찾아 석유화학 기업 등의 애로를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 (여수지역 약 2600개)에 올해 3월 법인 세 신고서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3월 31~6월 30일)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

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또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납세자 신정시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세무서에

서 직접 안내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제 혜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방문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산업 위기로 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

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시안이리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광주 노동자 생활임금 시급 ‘1만3303원’ 전국 최고

최저임금보다 28.9% 높아  
전남은 1만2305원 네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권리고사향  
전국 시행률 50.8% 저조

광주시의 생활임금(1만3303원)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만2305원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은 9곳(52.9%), 기초자치단체는 106곳(46.9%)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

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지방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조사 결과 생활임금을 도입·시행 중인 기관은 132곳으로, 전체 시행 대상 260곳 중 50.8%에 그쳤다.

광역자치단체는 17곳 모두 시행 중이었으며, 시·도 교육청은 9곳(52.9%), 기초자치단체는 106곳(46.9%)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모든 곳에서 시급 1만2000원대를 돌파했으며, 평균 시급은 1만2233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시였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인데, 광주시는 2983원 높은 1만3303원이었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 278만32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62만3447원 많은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1만2552원), 전북도(1만2410원), 전남도(1만2305원), 부산시(1만2275원) 순으로 생활임금이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시로 1만2010원이었다. 광주시와 비교했을 때 시간당 1293원이 적었다. 인천 다음으로 생활임금이 낮은 곳은 대구시로 1만2011원으로 확인됐다.

생활임금 수준은 광역자치단체(평균 1만2233원)가 기초자치단체(1만1805원)보다 높았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2만1353명)였고, 서울시(1만4000여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첫 도입한 곳은 7곳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남 광양시와 무안군, 부산 영도구, 충북 음성군,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 도입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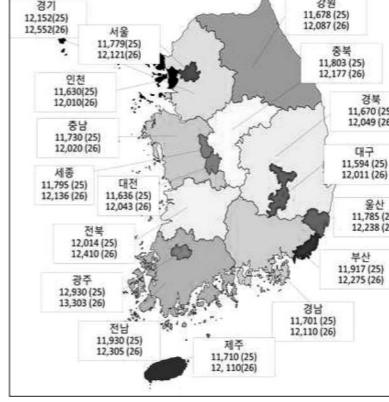
광주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는 기초자치단체 전 지역이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었고,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도는 1곳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 수준은 광역자치단체(평균 1만2233원)가 기초자치단체(1만1805원)보다 높았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2만1353명)였고, 서울시(1만4000여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첫 도입한 곳은 7곳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남 광양시와 무안군, 부산 영도구, 충북 음성군,

## 전국 광역시도 생활임금 현황



충주시 등이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임금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시행지역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조직과 간담회를 갖는 등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goback@gwangnam.co.kr

코스피 사상 첫 5100선 안착  
코스닥 4.7% 급등 ‘최고치’

코스피가 28일 사상 처음으로 51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해 ‘천스다’를 찍은 지 이를 만에 1100선을 넘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60.54p(1.19%) 오른 5145.39로 출발해 85.96p(1.69%) 오른 5170.81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5183.44까지 올랐고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가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5084.85)를 단숨에 갈아치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210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1조383억원을 순매도하며 상단을 제한했고, 외국인도 142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6708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관은 1233억원, 4986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1.82% 오른 16만24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역대 최초로 ‘16만 전자’를 달성했다.

전날 ‘80만니스’를 달성한 SK하이닉스는 이날도 5.13% 급등해 84만1000원으로 80만원대 굽히기에 들어갔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직전 거래일보다 5.51% 오른 43만1000원에 장을 마치며 시가총액 100조8540억원을 넘겼다.

이에 지난 19일 현대차에게 빼겼던 시가총액 3위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 왔다.

이외에도 상위 10개 종목인 현대차(0.82%), SK스퀘어(6.55%),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2%) 등이 올라 코스피 상승에 기여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0.88p(1.00%) 오른 1093.47로 출발해 50.93p(4.70%) 오른 1133.52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도 대부분 상승했다. 특히 에코프로(21.82%)와 펠트론(10.28%) 급등하는 등 대부분 종목들이 올랐다. 장 마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은 620조3129억원으로 처음으로 600조를 경신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2조3001억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다. 지난 26일 사상 최대 규모인 2조6000억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27일에도 1조7000억원을 순매수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근 3거래일 동안에만 6조5000억원 이상을 매수한 셈이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 광주신보-전남신보, 행정통합 지지 공동선언

### 지역경제 활성화·금융지원 강화 협력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8일 광주신보 본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양 재단 이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의 정책적·경제적 취지에 공감하고, 통합 신용보증 지원체계를 구축해 광주·전남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증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재단이 통합될 경우 기관 규모와 소

밀히 협력해 통합 과정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반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재산은 총 5155억 원(광주 2219억원, 전남 2936억원)으로 전국 3위 규모의 신용보증재단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보증 공급이 가능한 재단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긴

상공인 지원 기반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재산은 총 5155억 원(광주 2219억원, 전남 2936억원)으로 전국 3위 규모의 신용보증재단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보증 공급이 가능한 재단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긴

상공인 지원 기반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재산은 총 5155억 원(광주 2219억원, 전남 2936억원)으로 전국 3위 규모의 신용보증재단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보증 공급이 가능한 재단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긴

상공인 지원